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한·일 국장급협의 흑평

“어른 잠재우기·사죄는 배상 이행하면 될 일”

21개 단체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긴급기자회견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한·일 외교부처 국장급 협의에 대해 피해자 지원 단체가 ‘무의미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외교부는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양국 외교부처 국장급 실무 협의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이후 2주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아태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일각에선 양국이 강제징용을 둘러싼 ‘제3자 변제’ 해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징용 피해자 소송 등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이국연 시민모임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대로라면 제3자 변제 방식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가 제3자(대일청구권 수혜 기업 등)에 의한 징용 피해자 배상에 앞서 일본의 사죄를 거듭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국내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밝힌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담화 계승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큰 의미는 없다”며 “과거 사죄 담화 역시 한일 강제병합 등에 대한 불법 행위는 시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과하는 내용 자체도 ‘식민 지배’라고 명명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명시적인 사죄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사죄한다면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면 될 일이다.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정한 사죄라면 배상 책임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여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보고 있다. 한일관계 복원을 구실로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뒤집어쓰는 망국적 해법안을 강행할 태세라면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권형안 기자

영산강환경청,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섬진강 녹조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비점 오염원 설치 사업장 303곳을 지도·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청은 최근 3년 내에 위반 경향이 있거나 신규 사업장 등 47곳은 현장 점검을 한다. 나머지 256곳은 사업장 스스로 점검한다. 환경청은 설치 신고 시 사업장이 작성한 오염 저감 계획서 이행 여부를 살핀다. 비점 오염원은 도로·농경지·공사장 등 여러 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말한다. 오염원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류시설·인공습지·여과형시설 등 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일상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지난해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영암을 방문해 교통안전 용품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전달식은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이 절반을 넘게 차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홍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달식은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 손남일 전남도의회 의원, 김종득 영암경찰서장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어르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아이 나비시스템즈 등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했다. /박종배 기자

광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2174곳 안전감찰...연 말까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관리 등 시민 선정 5개 중점과제

광주시는 30일 ‘2023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감찰은 시민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관리 문제점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광주시, 자치구, 공사·공단으로 예방·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 중심의 중점과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설문에서 1순위로 선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이행 실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2174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설치 및 정기시설 검사 ▲보험가입 여부 ▲관리주체 의무사항 확인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감찰한다. 또 2순위로 선정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와 협업해 5개 자치구의 보호구역 지정·해제, 노상주차장 이전·폐지 등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보도육교가 내려앉은 것과 관련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육교시설의 손상상태 등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관내 전통시장 화재 예방 ▲소규모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및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감찰을 추진한다. /조일상 기자

광주학교비정규연대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광주학교비정규연대)가 단일 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광주학교비정규연대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교육부 등과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진전된 교섭안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전국 동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는 “공무원과 차별, 저임금 고착화를 거부하며 임금체계 개편 요구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사측은 임금체계 논의 자체를 거부한 채 기본급 3만5000원, 수당은 연간 20만원 인상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 공무원은 기본급이 2.7~5%까지 인상됐지만 비정규직에게 제시한 인상안 1.7%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더 악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에도 교섭이 결렬되면 신학기 총파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작물로 확대해야”

광주전남연구원 ‘가입률·재정지원·인프라’ 확대방안 제시

전국 최대 농도인 전남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품목에 국한된 재정지원보다는 도내 전반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보급·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30일 정책연구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태와 개선방안’ 발간을 통해, 전남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실태에 기초한 중점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가입률 제고를 위한 역할 추진과제

를 제시했다. 전남은 2022년 11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전국 2위(61%)로, 보험료의 90%를 국비 50%, 도·시·군비 40%로 보조하고 있으며, 유기 인증농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은 67개로, 고랭지감자와 양송이버섯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사과와 버 등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입률은 30% 미만이며 머물러 있고, 예산지원도 일부 고(高)가입률

품목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전연은 품목별 가입률과 보험료 지원현황 등 실적통계에 기초한 중점 지원 품목의 선정과 예산지원의 형평성 등 정책지원의 시스템적 고도화가 요구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가입률 평균이 50% 이상인 품목은 6개 품목에 불과하고, 10% 이하의 14개 품목으로 많아 저(低)가입률 품목에 대한 중점 지원방안 등 가입실태에 기반한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배 기자

전남 귀농·귀촌인 지하수 수질검사 ‘무료 지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귀농·귀촌인이다. 지하수 먹는 물 수질검사 46개 전 항목을 검사해 음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수질검사 서비스를 원하는 귀농·귀촌인은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지 확인 서류를 지참해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검사는 담당자가 신청 가구를 방문해 시료를 채수한 후 연구원에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결과는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된다. /박종배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